유일한 비수도권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지도부 입성할까

민주 전대 예비경선 마무리
대표 선거, '어대명' 대세 속
박용진·강훈식 단일화 변수
최고위원, 호남표 결집 여부 중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8·28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했다. 특히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당 대표 선거가 일방적인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2~3위 후보의 거센 도전이 빛을 볼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 유일한 도전자인 송갑석(서구갑) 후보의 예비경선 통과로 지도부 입성을 위한 '호남 결집'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으로 본선이 치러지는 만큼, 전체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중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박용진·강훈식 후보, '어대명' 프레임과 함께 1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17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 결과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기호순) 후보가 살아남았다. 이로써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고르게 본선 문턱을 넘어섰다.

장경태 후보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며, 박찬대 후보는 친이재명계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이며, 3선 서영교 후보, 일찌감치 '이재명 당대표'를 외쳤던 3선의 정청래 후보도 본경선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각각 지낸 '친문' 고민정·윤영찬 후보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좌장을 역임하고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영인 후보도 컷오프를 통과했다.

송갑석 후보는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만큼 유일한 '비수도권' 최고위원 후보로 꼽혔다.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이명계의 전략적인 투표가 예상되면서 본선 주자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진다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이재명계의 선두권 유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1인 2표의 특성상 '전략적인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재명계 후보가 있을 수 밖에는 없어 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선택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통상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낮았고, 코로나 19 여파로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각 후보의 조직력과 호남표의 결집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컷오프에서 당 대표 선거는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 기준이,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회 100% 기준이 반영됐다. 중앙위원회 선거인단은 국회의원(169명), 고문단(39명), 원외 지역위원장(84명),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10명),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장단 선거인단(75명) 등 383명 중 344명이 참여해 89.8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다음달 28일 예정된 본 투표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합산한 결과가 높은 순으로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컷 오프 이후 내달 2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서울과 경기권 대의원대회는 '비대면'으로 치러지며, 28일 송파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역시 소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당 대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각 부처 규제개선 조치 140건 완료"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기준으로 관리 중인 과제가 총 1004건에 달하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류된 과제 중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조실이 소개한 주요 개선 완료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재산 건물에 약국, 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원래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버섯, 밤, 잣, 대추 등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 구역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단지 설립이 허용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정조대왕함 진수식 참석…"해군 전투 역량 강화"

김건희 여사 진수줄 끊기 행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8일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다.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갖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무기 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경제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 이후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랐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34%·부정 54%

NBS 조사…각각 1%포인트 상승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2주 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하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격주로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6월 1주차 54%, 6월 3주차 49%, 6월 5주차 45%, 직전 조사인 7월 2주차 33%까지 내림세를 이어왔지만 이번에는 1%포인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2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4%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25%),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1%)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0%),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8%), '인사 실패'(15%) 등이 거론됐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29%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4%의 지지도를 보였다. /연합뉴스